

국 · 문 · 소 · 사

## ● 차세대 항생제는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아만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가 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웰컴트러스트 생거 연구소(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의 아나 토리비오 박사는 9월 4일 에든버러 대학에서 열린 제161차 일반미생물학회(Society of General Microbiology) 회의에서 쥐에 결장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시트로박터 로렌티움에 감염된 쥐를 박테리오파지로 완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보도했다.

토리비오 박사는 시트로박터 로렌티움은 인간에 식중독과 위장감염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가까운 박테리아로 쥐에 대장균과 같은 감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이 박테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케임브리지의 캠 강(江)에 서식하는 여러 박테리오파지를 뒤섞어 쥐에 투여했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란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와는 달리 세균에만 달라붙어 살면서 증식함으로써 결국 세균을 죽이는 세균바이러스로 일부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박테리아만을 공격한다.

토리비오 박사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만을 공격하는 특정 박테리오파지를 쓰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뒤섞은 카테일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박테리아의 돌연변이로 특정 박테리오파지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테리오파지가 미래의 항생제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비롯해 많은 박테리아들이 웬만한 항생제에는 모두 내성이 생긴 데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 대신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는 치료법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서유럽과 미국 과학자들로 부터 외면당해 주로 동유럽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왔다. 그루지야공화국의 트빌리시 박테리오파지연구소는 당뇨성 족부궤양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을 박테리오파지로 치료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웰컴트러스트 생거 연구소의 데렉 피커드 박사는 전통적인 광범위항생제는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물론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로운 박테리아마저 죽여 우리 몸의 박테리아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하면 그럴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7년 9월 5일

## ● 바르도 “스위스, 고양이 모피 판매 금지하라”

동물보호 운동가인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72)가 미셸린 칼미-레이 스위스 연방 대통령에게 편지

를 보내 스위스내의 고양이 모피 판매에 항의했다고 제네바 일간지인 트리뷴 드 쥬네브가 9월 12일 전했다.

이 편지에서 바르도는 “스위스와 같은 모범적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창피하다”면서 스위스 내 고양이 모피 판매는 “나를 매우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르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물의 모피 판매는 있어서 안된다”면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시민단체인 ‘고양이를 구하자’(SOS Chats)는 고양이 털가죽 판매 금지를 위한 청원서를 스위스 연방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바르도가 그 첫 번째 서명자가 되었다.

프랑스어 일간지 르 마탱의 보도에 따르면, 그라우뷘덴과 생 갈랭, 베른 칸톤(州) 등지에서 고양이 가죽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가죽은 시베리아 등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 단체 소속의 토미 토메크는 최근 생 갈랭 칸톤에서 15장의 고양이 털가죽으로 만든 무릎 싸개가 1천 700 스위스프랑(13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무릎 싸개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고양이 가죽들은 시베리아에서 수입해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고양이 가죽 제품 생산업자들은 길거리에 마구 돌아 다니는 도둑 고양이들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둑 고양이들은 어차피 없앨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르도는 “우리는 더 이상 중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며 그런 야만적인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지난 해 고양이 가죽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킨 프랑스의 예를 들기도 했다.

자신도 관절염과 둔부 통증을 겪고 있다는 바르도는 “나는 살아 있는 고양이들을 내 무릎에 올려 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이 유 특파원(lye@yna.co.kr)

2007년 9월 12일

### ● “죽음의 정의 바꿔야 한다”

죽음의 정의를 뇌사가 아닌 심장정지 등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배스 대학(University of Bath) 죽음-사회연구소의 앤린 켈리히어 박사는 이 대학에서 열린 죽음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뇌사를 의학적 사망판단 기준으로 삼아 생명유지장치를 떼고 이식용 조직이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BBC인터넷판이 9월 12일 보도했다.

켈리히어 박사는 “시체는 체온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임신기능도 없지만 뇌사자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뇌사를 사망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장기를 이식가능한 상태에서 적출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켈리히어 박사는 40년 전만 해도 죽음의 정의는 심장이 정지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했는데 인공호흡장치로 뇌사상태를 무한히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사망의 기준이 복잡하게 됐다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뇌사자와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뇌사자 중 1천 명에 한 명꼴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켈리히어 박사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윤리>(Bulletin of Medical Ethics) 편집인인 리처드 니콜슨 박사는 환자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여부를 묻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7년 9월 13일

### ❶ 심폐소생술(CPR), 복부압박이 더 효과적

정지된 심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은 인공호흡을 겸한 흉부압박보다는 인공호흡 없이 복부만 압박하는 것이 심장에 대한 혈류량을 더 늘릴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퍼듀 대학 생의학공학대학의 레슬리 제디스 박사는 의학전문지 ‘응급의학 저널(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9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심장정지 환자는 복부만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흉부를 압박하는 것보다 심장에 혈액을 25%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제디스 박사는 표준CPR인 흉부압박과 같은 힘으로 복부를 압박했을 때 심장을 움직이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관류량을 비교한 결과 복부압박이 25% 많았으며 또 흉부압박은 혈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역행성 혈류가 나타날 때가 있으나 복부압박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제디스 박사는 복부의 기관들에는 전체혈액의 약25%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부를 압박하면 이 혈액을 모두 심장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부를 압박하면 횡격막이 머리 쪽으로 밀려올라가면서 폐로 부터 공기를 밀어내고 복부에서 손을 떼면 공기가 폐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표준CPR처럼 인공호흡도 필요없다고 제디스 박사는 밝혔다.

이 밖에도 흉부압박은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복부압박은 그럴 염려가 없으며 복부압박은 오히려 너무 힘을 줘 누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표준CPR은 1분에 100번 100파운드의 압력으로 흉부를 압박하게 되어있지만 복부압박은 횟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누르는 압력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고 제디스 박사는 덧붙였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7년 9월 7일

국 · 뉴스 · 소식 · 기획

### ● “애완견에 놀라 노인 ‘파당’ 개주인 책임 75%”

열려진 아파트 현관문으로 애완견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이웃집 노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데 대해 개를 묶어두는 등 관리를 게을리 한 주인이 75%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6월 이모(85) 할머니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10층에서 내렸다.

어둑어둑해지던 오후 8시께 복도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던 이 할머니는 말티즈(애완견의 일종) 한 마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뛰어 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같은 층 주민의 애완견이 열어 놓은 현관문으로 빠져 나와 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이 할머니는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구급대원의 호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안종화 판사는 8일 이 할머니측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42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애완견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 갑자기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묶어두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만큼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할머니도 사고 당시 84세의 고령으로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고 이런 점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25%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안희기자(prayerahn@yna.co.kr)

2007년 9월 8일

### ● 파주 놀이공원 회전목마 동물학대 논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놀이공원이 살아있는 조랑말을 회전목마로 이용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3일 파주 A레저타운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A레저타운은 지난해 12월부터 승마체험장 내에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천원을 받고 ‘빙글포니랜드’라는 회전목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살아 있는 조랑말을 회전기계 안에 가두고 손님을 태운 채 4~5분 가량 회전판 위에서 빙글빙글 돌게하는 것이어서 동물학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의회 관계자는 “말이 기계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레저타운 관계자는 “40여 마리의 말을 교대로 투입하며 힘들어 하는 말이 있으면 곧바로 바꿔주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승 기자(jesus7864@yna.co.kr)

2007년 10월 3일

### ● 부산서 버림받는 애완동물 해마다 급증

부산에서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림받은 애완동물의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로 죽거나 안락사를 당하고 있어 애완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월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인없이 돌아다니다 포획된 개와 고양이 등 유기 애완동물은 지난 2003년 908마리였으나 2004년에는 2천261마리, 2005년에는 3천785마리, 지난해는 4천9마리로 3년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도 7월말까지 개 1천881마리, 고양이 348마리 등 2천229마리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버려진 애완동물 중 30일간의 법정 보호기간에 주인이 되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는 4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안락사 당하거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되고 있다.

지난해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3천632마리 가운데 주인이 되찾아간 경우는 219마리, 다른 사람이 입양해 간 경우는 444마리에 그쳤고 1천113마리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됐다.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로 죽거나(1천47마리) 안락사(809마리) 당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고양이의 경우는 375마리 중 305마리가 안락사 당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죽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리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급증하다 보니 부산지역 구·군이 유기동물 처리에 들이는 비용도 2003년 5천 157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3억원선으로 늘어 가뜩이나 빠듯한 자치단체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애완견 등록제가 시행되면 버려지는 개는 줄어들겠지만 고양이는 번식력이 높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분기별로 고양이들을 붙잡아 생식기능을 제거한 뒤 풀어주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애완동물 주인이 가정에서 더 이상 기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소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동물인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희 기자(ljh9502@yna.co.kr)

2007년 9월 14일

대한수의사회지

※ 본 지면은 (주)연합뉴스와 정보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관련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기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